

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 이번 인문계열 1교시 논술 고사는 지난 3년간의 문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경제>, <세계사>, <독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 이번 논술 고사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명명할 만큼 지구 환경과 기후 등이 급변하는 상황을 소재로 삼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인류세를 정의하고 기상 이변에 대처하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문에서 파악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행위가 먼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의 상황에서 현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해보도록 하였다. 상반된 두 입장을 지지하는 세 근거를 제시문에 소개하고 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문제1]과 [문제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파울 크뤼천이 주장하는 ‘인류세’를 소개하며, 교과서와 이론서 및 UN 환경 관련 보고서, 그리고 사례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2020년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의 이례적인 대규모 산불과 아시아 대륙의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한 홍수를 사례로 하여 인류세의 여러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 교과서

- 박철웅 외(2020), 『세계지리』 (p.45, 57, pp.237~239), 천재교육
- 이경호 외(2020), 『정치와 법』 (pp. 180~181), 비상교육
-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0~211), 비상교육

- 제시문 <나>는 산업화로 인해 가속화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 생태계의 변이에 대해 너무 비판하기보다, 지식 향상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의 새로운 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으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가올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교과서

-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0~211), 비상교육

- 제시문 <다>는 인류세의 도래에 따른 생태 시스템의 균열이 단순한 생태계의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연의 역습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경제성장은 자본이 축적되는 만큼 자원의 소비와 쓰레기 배출의 양도 증대시켰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차원에서의 수치 증가는 엄청난 규모로 가속화되었고, 이는 지구시스템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자연은 이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협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비롯된 급격한 변화 속도의 완화와 적응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교과서

- 박철웅 외(2020), 『세계지리』 (p. 179, pp. 192~198), 미래앤
- 김국현 외(2017), 『생활과 윤리』 (pp. 147~148), 비상교육
-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0~211), 비상교육

- 제시문 <라>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가에 대한 경제문제에 덧붙여 언제 생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세대 간 자원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원의 가용량 등에 대해 미래 세대의 수요를 예측하여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버크가 말한 바와 같이 초세대적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미래세대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적자원 및 자연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관련교과서

- 박철웅 외(2020), 『세계지리』 (pp. 178~181), 미래앤
- 김국현 외(2017), 『생활과 윤리』 (pp. 144~146), 비상교육
- 유종열 외(2020), 『경제』 (pp. 14~16), 비상교육

- 제시문 <마>는 제시문 <라>와 대립하여, 모호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된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을 제기한다. 어느 정도의 인내와 얼마만큼의 불편 감소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가 될 수 있는지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세대에게 도덕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친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어린 세대들에게 불합리한 요구가 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오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요구가 현세대에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교과서

- 유종열 외(2020), 『경제』 (pp. 17~20, p. 81), 비상교육
- 고희진 외(2020), 『독서』 (pp. 74~78), 비상교육
-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2~213), 비상교육

다. 문항 해설

<문제 1>

- 본 문제는 제시문 <나>와 <다>로부터 인류세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관점에 따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명명할 만큼 지구 환경과 기후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각각의 평가를 수험생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늘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 등의 지구시스템 교란에 대해 어떤 처방이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와 <다>에서 소개한 인류세의 제반 문제를 극복하는 상반된 처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지질층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인간의 지구시스템 교란 능력이 강대해졌으며 그런 교란의 결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산불, 홍수 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가>에서 예로 든 이상 기후나 천재지변이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인류세에 출현하는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위험 역시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나>의 관점에서는 <가>에 소개된 호주나 미국의 대규모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역시 인간에게서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창의적 방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이는 국지적 재난에서 그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본다. 반면에 <다>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시스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다>에 따르면 호주나 미국의 산불, 중국의 폭우,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격되는 이상 기후 현상은 인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인간을 '오스러뜨리려는'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징조라 할 수 있다.
- 셋째, <가>에 대한 <나>와 <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설득력 있게 논술하여야 한다. 수험생이 제안하는 처방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처방이 <나>와 <다>의 평가에 대해 수험생이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유념하여 논의 선후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도록 답안을 서술하도록 한다. 처방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나>는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조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적시적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창의성을 꽃피우는 환경 조성을 제안할 것이다. 반면 <다>는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책으로 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포기할 것을 먼저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기술적 편의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점에 현재 인류가 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제안할 것이다. <나>의 처방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기상 이변 등의 전지구적 환경 변화를 산업화 이후 진행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인간의 기술적 성취가 앞으로도 유효하리라 과신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고, <다>의 처방은 반대로 위험을 과장하여 자연의 회복력에 지나친 우려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인간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은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기술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험생 자신의 처방은 <나>에 동의하거나 <다>에 동의하거나, 양쪽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나>나 <다>에 동의할 경우 반대쪽 관점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며, 절충안을 채택할 경우 기술의 활용과 절제라는 상반된 전략이 어떻게 양립가능한 형태로 분담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2〉

- 본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세대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견해와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논증하는 제시문 <라>와 <마>의 주장을 각각 세 가지 근거와 함께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험생이 반박하고자 하는 견해를 <라>와 <마> 중에서 하나 선택해 그 속에 포함된 두 가지 근거를 비판하고,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청의 조치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적용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본 문제에 대해 수험생은 <라>를 선택해 그 속에 포함된 두 가지 근거를 비판하고, 그에 입각해 친환경트럭 판매 의무화 제도를 평가하거나, <마>의 견해를 선택해 마찬가지로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어느 쪽 견해를 선택하든, 지지하는 세 가지 근거가 제시문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비판 과정에서 응시자는 이 근거들의 핵심 내용과 그 근거가 갖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라>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내용이 답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서도 현세대는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현재 우리의 도덕감에 비추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2)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유대로 묶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이 있듯이 현세대도 미래세대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3)국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초세대적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다른 구성원인 미래세대의 안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 세 근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므로 이중 둘을 골라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현재 세대의 도덕감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문은 불행하게 살 것이 예견되는 아이를 갖지 않는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직접 낳게 될 아이의 불행한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과 장래에 태어날 타인의 불행한 삶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갖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례의 그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이웃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이웃도 미래세대를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해야 마땅할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2)부모-자식-손자 간의 관계와 현세대-미래세대 간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있다. 현세대가 먼 미래세대에 대해 희생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에 한정될 뿐이다. 이것을 넘어 먼 미래세대 일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3)미래에도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그 국가가 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도덕적 연대 공동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가가 각 개인에게 지우는 의무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 자유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셋째,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리라 예상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 <마>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내용이 답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 현세대에 책임과 의무를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설령 현세대가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런 남용덕분에 피해를 입는 그 세대가 탄생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며, (2)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부조리, 불평등에 관대하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을 가장 열악한 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며, (3)우리 도덕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 부담은 현재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 세 근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므로 이중 둘을 골라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미래세대가 누리는 삶 자체가 현재세대의 결정의 결과이므로 그 결정이 설령 무책임해보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는 첫 번째 근거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그 자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인류세 상황에서는 현세의 무분별한 행위가 단지 미래세대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비참한 종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과 현재의 부조리와 불평등 개선에 힘쓰는 것이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손쉬운 해결책만 고민하는 불성실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등 둘을 동시에 성취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3)인간의 제한된 도덕적 사유 능력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된 능력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도덕적 사유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심리적 효과에 쉽게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그러한 실수를 예방할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비효율성은 사회적 차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극복가능하다. 셋째,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서서히 확대한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치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매우 미흡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3. 평가기준

채점 기준		배점
문제1	•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였는가?	5
	•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었는가?	15
	• <가>에 대한 <나>와 <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15
	•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설득력 있게 논술했는가?	10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는가?	5
문제2	• 제시문 <라>나 <마>에 제시된 주장과 세 가지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 요약하였는가?	15
	• 요약된 세 가지 근거 중 둘을 선택해 적절히 비판하였는가?	20
	•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있게 논술했는가?	10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는가?	5

<문제 1>

1번의 답안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기

둘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셋째, <가>에 대한 <나>와 <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넷째,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설득력 있게 논술하기

첫째 부분 (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지질층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인간의 지구시스템 교란 능력이 강대해졌으며 그런 교란의 결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산불, 홍수 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게 기술되었는지 점검한다.
- <가>에서 예로 든 이상 기후나 천재지변이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기술하였는지 점검한다.

둘째 부분 (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나>의 관점에 맞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점검한다.
 - (1) 인류세에 출현하는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위험 역시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2) <가>에 소개된 호주나 미국의 대규모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역시 인간에게서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빈번해질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창의적 방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국지적 재난에서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이 드러나야 한다.
- <다>의 관점에 맞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점검한다.
 - (1) 인류세를 지금의 유형과는 다른, 인간의 기술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구로 지구시스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2) 호주나 미국의 산불, 중국의 폭우,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격되는 이상 기후 등은 인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인간을 '으스러뜨리려는'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징조라는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야 한다.

셋째 부분(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나>의 인류세 평가에 대해 적절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인류세에 대한 <나>의 인식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기상 이변 등의 전지구적 환경 변화를 산업화 이후 진행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인간의 기술적 성취가 앞으로 유효하리라 과신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과학 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비판의 설득력을 높일 수도 있다.
- <다>의 인류세 평가에 대해 적절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인류세에 대한 <다>의 인식은 반대로 위험을 과장하고 자연의 회복력에 지나친 우려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인간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은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기술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빙설이 녹자 이를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활용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도 있다.

넷째 부분(10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2점)

-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이 앞서 이루어진 <나>와 <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검토로부터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지 점검한다.
수험생 자신의 처방은 <나>에 동의하거나 <다>에 동의하거나, 양쪽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나>에 동의할 경우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책으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조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적시적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창의성을 꽃피우는 환경 조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에 동의할 경우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책으로 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포기할 것을 먼저 주문하고, 아울러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기술적 편의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점에 현재 인류가 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절충안을 채택할 경우 기술의 활용과 절제라는 상반된 전략이 어떻게 양립가능한 형태로 분담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2>

2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라>나 <마>에 제시된 주장과 세 가지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 요약하기
- 둘째, 요약된 세 가지 근거 중 둘을 선택해 비판하기
- 셋째,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기

첫째 부분(15점, 세 근거 요약 답안 각각의 수준별 점수차 1점)

- <라>를 선택할 경우 다음 주장과 세 근거가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서도 현세대는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현재 우리의 도덕감에 비추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2)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유대로 묶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이 있듯이 현세대도 미래세대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3)국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초세대적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러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한 다른 구성원인 미래세대의 안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마>를 선택할 경우 다음 주장과 세 근거가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 현세대에 책임과 의무를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설령 현세대가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런 남용덕분에 피해를 입는 그 세대

가 탄생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며, (2)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부조리, 불평등에 관대하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을 가장 열악한 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며, (3)우리 도덕 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 부담은 현재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부분(20점, 근거 비판 답안 각각의 수준별 점수차 2점)

- <라>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세 비판 중 두 가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1)현재 세대의 도덕감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문은 불행하게 살 것이 예견되는 아이를 갖지 않는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직접 낳게 될 아이의 불행한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과 장래에 태어날 타인의 불행한 삶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갖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례의 그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이웃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이웃도 미래세대를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해야 마땅할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 (2)부모-자식-손자 간의 관계와 현세대-먼 미래세대 간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 현세대가 먼 미래세대에 대해 희생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에 한정될 뿐이다. 이것을 넘어 먼 미래세대 일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 (3)미래에도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그 국가가 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도덕적 연대 공동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가가 각 개인에게 지우는 의무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 자유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 <마>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세 비판 중 두 가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1)미래세대가 누리는 삶 자체가 현재세대의 결정의 결과이므로 그 결정이 설령 무책임해보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는 첫 번째 근거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식을 확대하는 부모도 그 자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인류세 상황에서는 현세의 무분별한 행위가 단지 미래세대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비참한 종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2)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과 현재의 부조리와 불평등 개선에 힘쓰는 것이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손쉬운 해결책만 고민하는 불성실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등 둘을 동시에 성취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 (3)인간의 제한된 도덕적 사유 능력을 겸허히 인정해야한다는 지적은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것처럼 제한된 능력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도덕적 사유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심리적 효과에 쉽게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그러한 실수를 예방할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비효율성은 사회적 차원의 제도 보안을 통해 극복가능하다.

셋째 부분(10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2점)

- <라>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리라 예상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 <마>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

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서서히 확대한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치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매우 미흡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 [문제1]의 네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및 [문제2]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를 모두 합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90점 이상
- 3등급: 85점 이상
- 4등급: 75점 이상
- 5등급: 60점 이상
- 6등급: 60점 미만

※ 각 문제별로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각 문제별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700자~799자: 5점 감점, 600자~699자: 10점 감점, 600자 미만: 6등급, 백지답안: 7등급

4. 예시답안

〈문제 1〉

〈가〉는 인류세라는 새 지질층을 낳을 정도로 인간의 지구시스템 교란 능력이 강대해졌고 그런 교란의 결과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산불, 홍수 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류세의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 〈나〉는 지구는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그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더라도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호주나 미국의 대규모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역시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창의적 방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국지적 재난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본다. 반면 〈다〉는 인류세란 인간의 기술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구로 지구시스템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뜻한다고 본다. 코로나19에도 여전히 이상 기후는 인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인간을 '으스러뜨리는'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는 징조라는 것이다.

〈나〉의 인식은 전지구적 환경 위기를 산업화 이후 진행된 생태계 오염 및 파괴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기술적 성취가 앞으로도 유효하리라 과신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미세먼지처럼 과학기술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의 인식은 위험을 과장하고 자연의 회복력에 지나친 우려를 표하면서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은 과대평가하는 한편, 그 기술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빙설이 녹자 이를 이용할 수력발전을 도입한 네팔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새로운 활용은 늘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통제 가능한 위험에는 기술 혁신을, 불가능한 위험에는 원인 억제의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기술의 활용과 절제라는 상반된 전략을 양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신체까지 전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록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삶의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 이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997자)

〈문제 2〉 〈마〉를 선택해 요약, 비판하는 경우

〈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 현세대에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설령 현세대가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했다라도 그런 남용덕분에 피해를 입는 그 세대가 탄생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며, (2)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부조리, 불평등에 관대하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을 가장 열악한 계층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며, (3)우리 도덕 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 부담은 현재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근거 (1), (2)에 대해서는 다음 비판이 가능하다. (1)미래세대가 누리는 삶 자체가 현세대의 결정의 결과이므로 그 결정이 설령 무책임해보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그 자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류세 상황에서는 현세의 무분별한 행위가 단지 미래세대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비참한 종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과 현재의 부조리와 불평등 개선에 힘쓰는 것이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손쉬운 해결책만 고민하는 불성실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등 둘을 동시에 성취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서서히 확대한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치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96자)

(※ 마지막 단락의 경우, 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